



Module 3.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왜 해야 하는가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표준 강의안

청탁금지법 개념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검사들의 부패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

그러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선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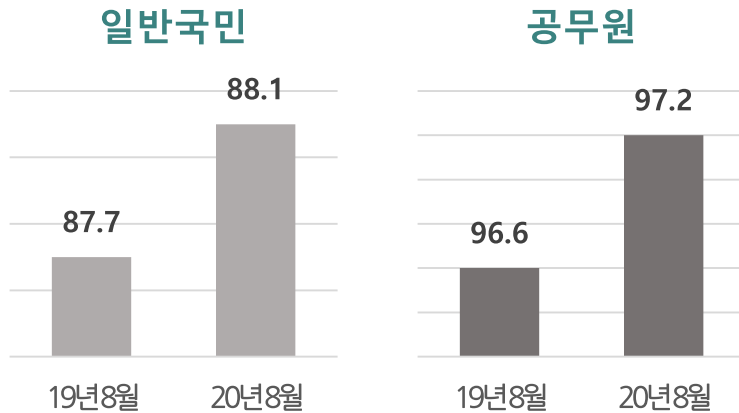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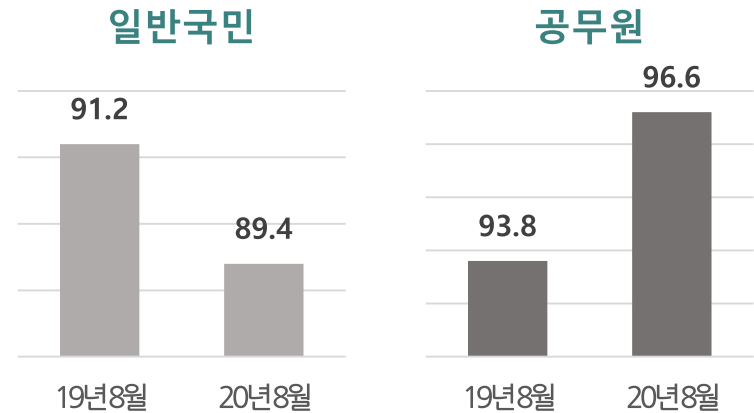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위 : %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단위 : %



국민(88.1%), 공무원(97.2%)의 대다수가 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국민(89.4%), 공무원(96.6%)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음

청탁금지법 필요성

부정청탁 금지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청탁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 방지,
직무수행의 공정성 강화

공무원



국민



금품등의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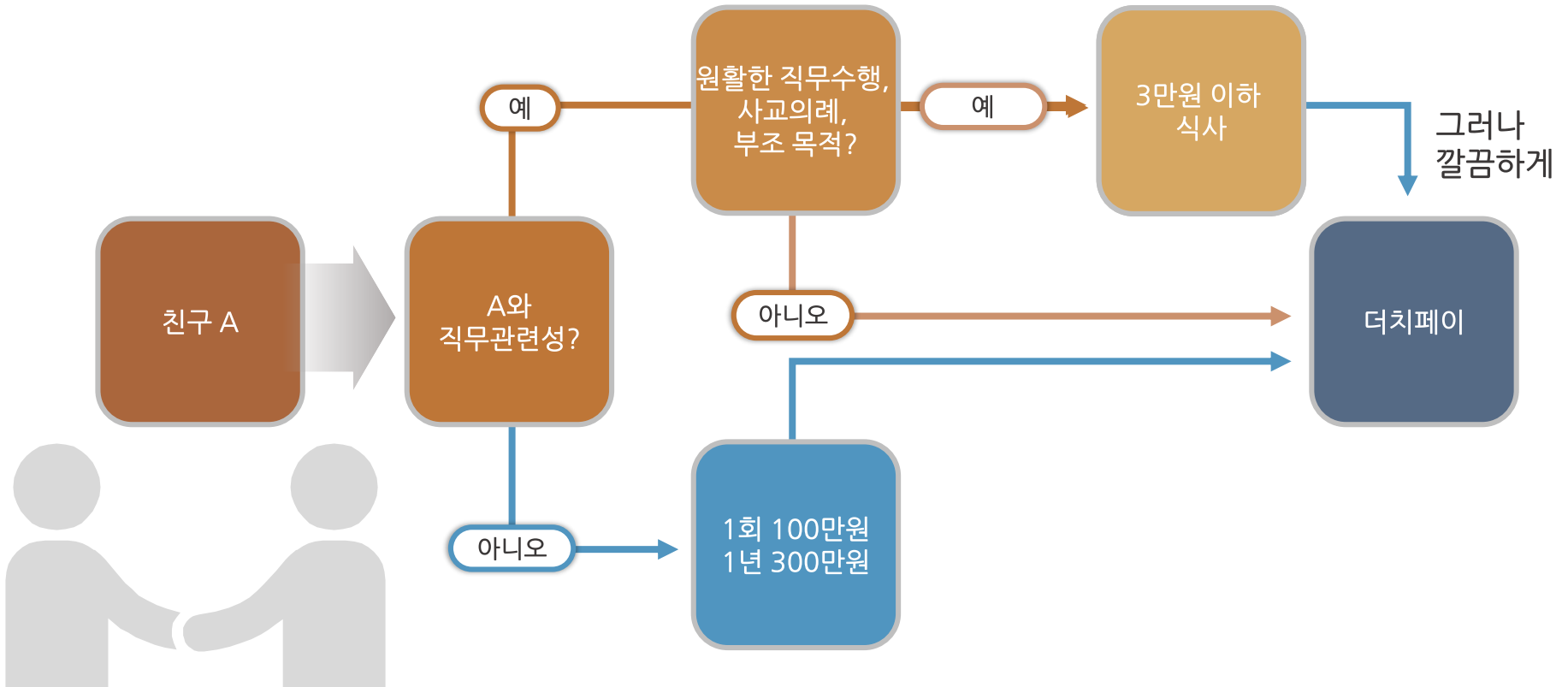
- 허용기준을 벗어난 금품수수금지
-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한도를 초과하는 대가수수 금지

-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제공·약속·의사 표시 금지

금품등의 이익으로 매수되는 것을 방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회복

인맥이 아닌 신뢰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 구현

일상생활 속 청렴으로의 의식전환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이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뀐다



2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표준 강의안

청탁금지법 개념

개념

부정청탁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개념

적용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국·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들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 금지행위

개념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적으로 규정

1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선정·탈락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선정· 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 사례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사례



OMR답안지 마킹 실수로 재기회 청탁

A는 2017. 10. 17 본인의 아들인 B로부터 2017년 제2차 ○○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 C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함

처리결과: A 과태료 8,000,000원, B 과태료 3,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3조제3항



자녀의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

A는 B회사 건설사업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인의 아들인 C가 2017년 하반기 B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B 소속 면접위원들에게 아들의 실무면접 전형과정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1월 본사 채용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아들 C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청탁

처리결과: A 과태료 10,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부정청탁 사례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사례



제3자를 위해 채용 관련 자료 요청

A는 B를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C과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B는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함

처리결과: 과태료 A 10,000,000원, B 5,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직원 채용 청탁 전화

위반자 A는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함

처리결과: A 과태료 5,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부정청탁 사례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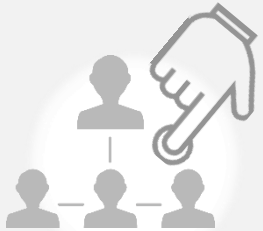


제3자에게 본인의 승진 청탁

위반자 A는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냄

처리결과: 과태료 A 3,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청탁

A, B는 2017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처리결과: A, B 과태료 5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적용법령: 제5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부정청탁 사례 계약 관련 청탁

사례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청탁

위반자 A는 유한회사 C가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에게 'C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

처리결과: 과태료 A 15,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자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부탁

위반자 A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A의 동생 H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I에게 H이 운영하는 통신업체 J와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함

처리결과: A 과태료 9,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부정청탁 사례 편의 관련 청탁

사례



교육공무원들이 이용 가능한 수련원 객실 이용 부탁

위반자 A는 ○○도의회 직원 C 등을 통하여 ○○교육청 D에게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E수련원 F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함

처리결과: 과태료 A 5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제23조 제3항

부정청탁 예외사유

개념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예외사유 사례

사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일반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우며,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 매체, SNS 게시 등을 통한 요구와 같이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제2호)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C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자신의 친구인 C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함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념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수수행위 금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념

금품등의 종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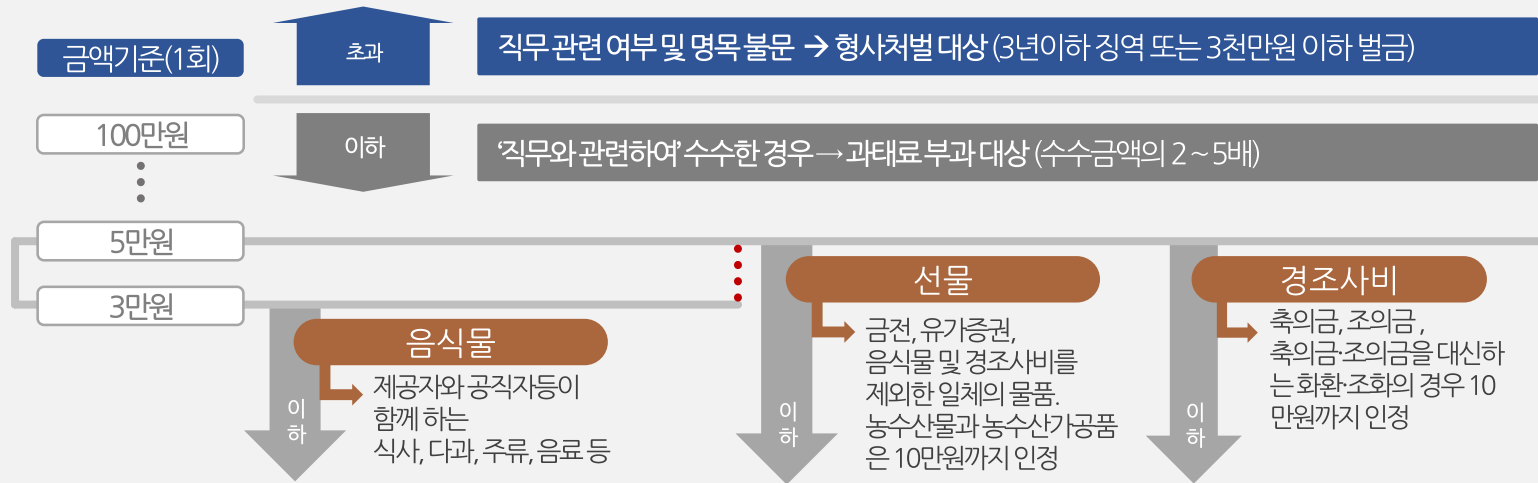
1.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념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5만원) 예외적 허용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수수금액의 2~5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금지

개념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제8조 제4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



제22조 제1항 제2호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는 제외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개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공직자등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총액한도 :
1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 초과 불가
※ 각급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가능

외부강의등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신고 및 반환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의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로 변경(2020.5.27.시행)

양벌규정

개념

-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음식물

사례



조합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

A는 자동차 관리사업체(자동차 정비업체, 매매업체)의 등록, 지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17년 7월 B시 소재의 식당에서 C 조합의 이사장, 임직원 및 조합원 총 21명과 함께 60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으며, C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였음

처리결과: A 과태료 6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



식사, 주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

A는 공기업 팀장으로 협력사 C의 팀장 D는 A의 소개로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바 있음.
A는 D로부터 2017년 12월 식당에서 280,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이후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합계 2,2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부 서비스를 대접받았음

처리결과: A 과태료 1,7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23조제5항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등을 제공받은 행위

위반자 A는 E식당, F유흥주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 H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J 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K회사 L로부터 37,5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음

처리결과: A 과태료 2,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선물

사례



병동회비로 명절선물 수수

A는 직무관련자인 C병원 중환자실 소속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명절선물 명목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을 2차례(2017년 추석, 2018년 설날)에 걸쳐 200,000원 상당 수수하였고, B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3차례(2017년 설날과 추석, 2018년 설날)에 걸쳐 300,000원 상당을 수수함

처리결과: A 과태료 400,000원, B 과태료 600,000원 부과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우산고로쇠물 제공

위반자 A는 ○○도 B어촌계장이자 C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8년 3월 ○○○수산청 소속 공무원 5명에게 한 사람 당 1~2 박스씩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 시가 합계 400,000원(=1박스당 50,000원 × 8박스) 상당을 제공하였음

처리결과: A 과태료 8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한과세트를 명절선물로 제공

위반자 A는 2017년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위원장과 도지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무국장 등 총 11명에게 각 15,000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제공하였는데, 2016년 위원장으로부터 회계처리 부 적정, 근무상황관리 미흡에 관하여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

처리결과: A 과태료 5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현금

사례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

중학교 교사 A는 학교 과학실에서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제공하였음

처리결과: A 과태료 2,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공사 B지사의 토목직 공무원 A는 주식회사 C(B지사 관내의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음)의 이사 D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음

처리결과: A 과태료 3,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접대·향응

사례



인허가 및 건축사 지도감독-골프접대

건축사무소 대표 A는 ○○군 도시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C(○○군 건축 인허가 및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담당)을 비롯하여 D, E와 함께 골프를 치며, A는 C의 골프비용 130,000원을 부담하였음.

처리결과: A 과태료 26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및 향응 수수

위반자 A는 C시 공무원으로서 청사 내 CCTV 및 통신장비 설치업무를 담당하던 중, CCTV 설치업체 D 대표 E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E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고, ○○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F 영업부장 G로부터 3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처리결과: A 과태료 2,35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외부강의등

사례



1시간 40만원, 1회 60만원 초과

A는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회당 60만원씩 29회에 걸쳐 1,740만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

처리결과: 과태료 3,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3조



사전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B는 외부강의를 하면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지 않았음

처리결과: 과태료 4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 제10조제5항



공직유관단체 상한액 초과 수수

00공사 공직자인 C는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14차례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도 않았음

처리결과: 과태료 5,000,000원

적용법령: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0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사례

사례



甲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甲의 결혼식에 초등학교 동창회장 A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사례

사례



경찰 공제회가 재직 중인 공상 경찰 공무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甲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되어
3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텔레비전을 상품으로 수령한 경우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사례

사례



자동차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 받는 경우



항공사가 이코노미 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들의 좌석이 비즈니스 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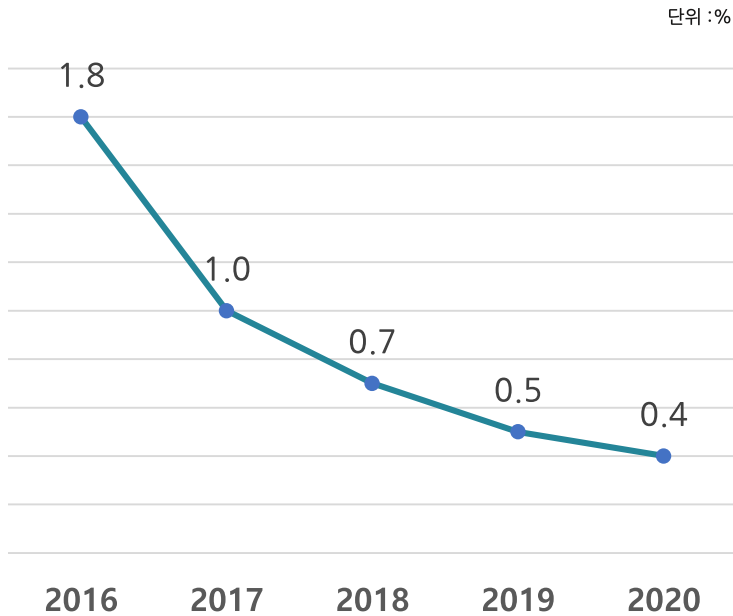
3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표준 강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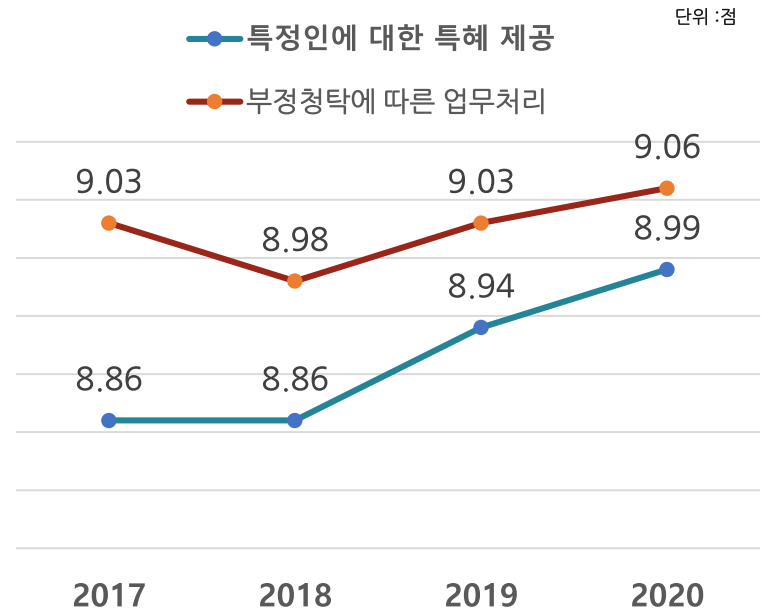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4년 시행, 달라진 일상

금품·향응·편의부패경험률



청렴도 측정(부패경험률 조사 결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도 측정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청탁금지법 4년 시행, 우리의 과제

국민권익위원회

과제1

잘못된 관행
근본적인 개선

과제2

대국민·기업
인식 확산

과제3

엄정한 제도 운영
적극 지원

과제4

청탁금지제도
지속적인 보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과제?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 해고 정당

2019.09.26

부정 청탁으로 합격한 0000 직원 해고 정당 첫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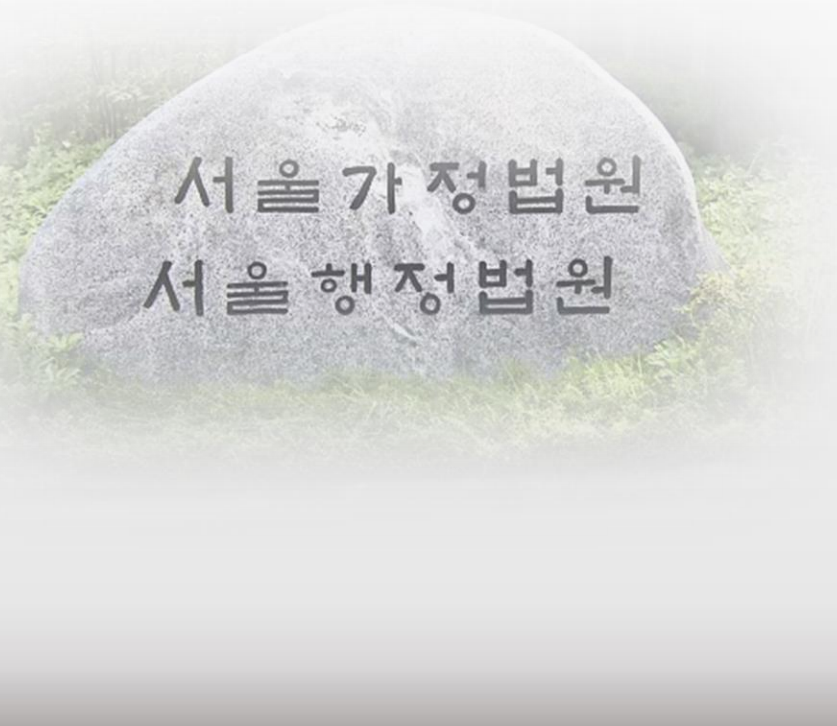


가족 등 지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0000에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줄줄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0000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박이인 A씨는 2012년 겨울 0000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의 한 명입니다. 이후 인턴과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신분을 바꿔 2018년까지 5년여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0000가 2015년 진행한 감사 결과, 2012~2013년의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 비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임원, 관련 기관, 국회의원 등이 청탁을 하면 이들이 추천한 응시생들의 전형별 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 시켜 준 것입니다. A씨가 응시한 2012년의 경우 최종 합격한 320명 가운데 295명이 0000가 따로 관리한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A씨 역시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 공무원 출신으로 0000 팀장을 지낸 B씨에게 중학교 동창이던 아버지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 합격자의 퇴출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자 A씨는 불복한 끝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으므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아버지의 청탁 덕에 청탁 대상으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탁 없는 공정한 사회

“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시키면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니,
이는 공정하지도 못한 일이다.

”

-이분(이순신의 조카)의 '충무공행록(忠武公行錄) 중

